

# '전북 주도 에너지 대전환' 제안

"전북은 전기를 만들지만 쓰지 못하고, 송전탑은 세워지는데 미래 산업은 오지 않는 기막힌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무주·진안·완주)이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송전탑 갈등과 에너지 행정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북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을 공식 제안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인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전북은 심각한 '에너지 모순'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탑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작 전북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송전선로 부족으로 멈춰 서 있다"며 "전기를 살어 나르는 철탑은 늘어나지만, 그 전기를 도민과 기업은 쓰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전북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의 책임을 김관영 전북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그는 전북의 현 에너지 행정을 '4대 실정'으로 규정하며 조목 조목 문제를 짚었다.

첫째는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다. 안 의원은 "도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에는 소극적이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한전 송전선로에만 의존해 왔다"며 "그 결과 계통 포화라는 벽에 부딪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마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이다. 그는 전남도의 사례를 들며 "전남은 도비를 투입해 7만 볼트급 중규모 재

민주 안호영 의원, "지금 전북, 에너지 모순의 한복판" 한전 바라기 정책 실패 등 전북 에너지 행정 문제제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전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송전탑 갈등과 에너지 행정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북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을 공식 제안했다.

생에너지 송전망을 자체 구축했고, 결국 이를 국비 사업으로 확대했다"며 "전북이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을 때, 전남은 스스로 길을 뚫었다.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셋째는 불통 행정이다. 안 의원은 "송전탑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도민과 함께하지 않는 행정으로는 어떤 에너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넷째는 실의 없는 희생의 방치다. 그는 "전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북 땅이 송전탑 받이 되고 있다"며 "전북은 '전기 길'만 내주는 틀러리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북도는 이 모든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려왔지만, 실상은 내부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더 큰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의 미래를 우려했다. "현 정부의 송전망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새만금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2031년까지 외부 송전선로가 막혀 있어, RE100 산업단

지를 지정해도 공급할 전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만들어지지 못하는 전기를 두고 한전의 송전선로만 기다리는 '희망고문'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명확했다. "송전탑 대신 공장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력난으로 멈춰 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즉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는 방치된 농생 명용지와 규제가 거의 없는 에너지용지가 있다"며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결합하면 원전 4기 규모의 전력을 송전할 필요도 사실상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1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김관영 지사에게 "한전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을 끊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도민들에게도 호소했다. "송전탑 반대를 넘어, 우리 땅에 공장을 가져오는 행동에 나서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옮겨야 한다고 밝힌 지음이 바로 전북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지난 민선 8기 전북지사 예비경선에서 김관영 현 지사에게 패한 바 있으며, 이번 경선에서 차기 민선 9기 도지사 선거에 도전한다. /이만호 기자

## "남원의 먹고시는 문제부터 해결"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남원시장 출마 공식화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제9대 남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출마지는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시점이 되겠다"며 도민 앞에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출마지의 핵심 공약은 '남원형 기본소득'이다. 그는 "취업 즉시 모든 시민에게 시비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연 18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제드론센터, 합파우 아트밸리 등 대규모 사업 예산의 재조정을 제시하며 "순창군 사례에서도 보듯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정책도 비중 있게 제시했다. 김 출마지는 "농업은 남원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고령화와 영세농 구조 속에서 농업소득이 심각하게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추가 편성, 은퇴농 멘토단 운영, 청년농 주거·농지·소득 원스톱 지원을 약속했다. 청년농에게 해의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농 학습년제' 도입과 영농형 태양광 확대 구상도 내놓았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광한투 무상화'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출마지는 "광한투를 담장을 최소화 하여 폐쇄형 이미지를 없애



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원 전체를 '살아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모노레일과 허브밸리 등 실패한 관광사업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감사과 체험 중심 관광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김 출마지는 남원을 지리산권 거점 교육 발전 특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행정 혁신 방안으로는 간부회의 생중계 등 투명 행정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김 출마지는 "남원을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받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평생 실천해 온 남원사랑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각별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왕적 조합장 구조를 개선하고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었던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 연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면 통일해 조합원의 권한을 확대했다.

반복되는 농협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동일 감사인이 장기간 감사를 맡는 것을 제



한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했다.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모집 원칙 등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울러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농협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의무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촌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이 농민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추가 개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 전주·익산·군산·완주가 함께 키우는 '전북형 프로야구'

'도백 출마' 정현을 익산시장

전북 1호 공약 공식 발표

'전주·익산 등 4개 지자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프로야구의 광역단위 경제

파급 효과 주목해야'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정현을 익산시장이다. 지난 1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하나로, 100만 광역야구 시대'를 전북 1호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다가오는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현을 익산시장이다.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하나로, 100만 광역야구 시대'를 전북 1호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금 전북은 각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며 "프로야구를 통해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전주·익산·군산·완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연고 프로야구 모델'이다. 전주는 홈구장과 상징성을 담당하고, 익산은 훈련과 육성, 군산은 전통과 인재 기반을 맡고 완주는 교통과 생활연계를 맡아 경쟁이 아닌 분업과 연대로 전북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익산의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익산시는 지난 10년간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실내 야구 연습장, KT 야구회관, 스포츠 조명 등 야구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2016년부터 KT 위즈 프로야구단 2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중 50경기 이상의 퓨처스리그 홈경기가 익산에서 열리며 선수단 상주에 따른 지역 소비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시장은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지역 활성화 산업"이라며 "관객력 평균 연령이 낮고, 관람 빈도와 지출 수준이 높은 대표적인 생활형 여가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야구가 전국적으로 약 1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며, 광역 단위 경제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프로야구를 품을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는 점도 부각했다. 1990년대 전주를 연고로 했던 쌍방울 레이더스의 기억이 여전히 도민들의 집단 기

억 속에 남아 있고, 전주교와 군산 상일고를 중심으로 한 야구 인재 기반도 탄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익산의 KT 위즈 2군 운영 경험은 전북이 이미 KBO가 검증한 인프라와 운영 능력을 갖춘 지역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KBO 기준을 충족하는 2만 석 이상 규모의 야구장을 중심으로 문화·상업시설이 결합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도 제안했다.

익산과 군산의 기존 야구 시설과 연계해 전북 전역을 하나의 야구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주 KCC 농구단의 연고 이전으로 인한 도민들의 상실감도 언급했다. 정 시장은 "종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다시 함께 응원하고 자부심을 나눌 대표 스포츠 상징을 회복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2026년 전주권 프로야구단 유치 추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7년 구장 부지와 재원 조출을 확정해 KBO에 공식 창단을 제안한 뒤, 2028년 이후 구장 착공과 구단 운영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의회, 내년 본예산 1조7931억원 승인

올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결

계수조정을 거쳐 총 18건에 68억3,0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6년 본예산을 1조 7,931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5분발언에서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 체육시설 기반의 한계로 인해 전국대회 개최가 불가한 점과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역시 충

분히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을 포함시켰다가 제외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단순히 마무리된 일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지난 5년간 1,919억 원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는데, 이 중 시 자체 인력과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농어촌공사에 떠넘기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지방의료원, 비용 아닌 지역 생존 인프라"

윤수봉 도의원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지난 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지방의료원'을 주제로 한 세션 토론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날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이는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 혁신당 도당, 김선민 의원 초청 '사회권 선진국' 특강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김선민 국회의원을 초청해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을 비롯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해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조하며,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현행 돌봄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구 전담 조직 구축, 전문 케어 매니저 배치,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휴식돌봄' 제도화와 함께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사회적 평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제7공화국의 핵심 방향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